

“

현재 우리나라에는 197개 국적의 외국인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인종, 민족, 언어, 종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영주권자, 난민 등
다양한 체류 배경을 가지고 있다.

”

03

03

다문화사회를 위한
외국인 정책

[자료 제공: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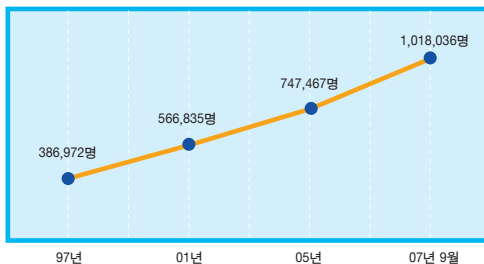
1.배 경

우리나라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8월 기준 100만 명이 넘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수인데 10년 전인 97년의 38만 여명에서 2.6배 증가한 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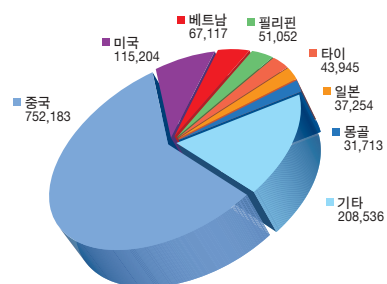
체류외국인 수의 꾸준한 증가와 아울러 이들의 정착화(국내에 장기간 생활의 근거를 두고 거주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 특히 결혼이민자의 수는 2007년 9월말 현재 (10만 7천여명)으로 2001년 대비(2만 5천여명)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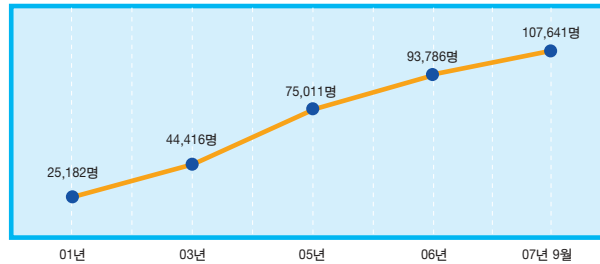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국내 체류 외국인 분포도



결혼 이민자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197개 국적의 외국인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인종, 민족, 언어, 종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영주권자, 난민 등 다양한 체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우리 사회에 적응토록 하는 문제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 단편적으로 추진하던 외국인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06.5.26.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게 된 배경이다.

또한 외국인정책 심의·조정기구로서 외국인정책위원회('06.5.23.), 총괄추진기구로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07.5.10.)가 출범하였고 외국인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어 '07.7.18. 시행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는 국경관리 차원에서 소극적·폐쇄적인 관점에서 출입국 법령과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이제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그간의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노동인력과 인재유치, 사회통합,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상호이해와 공존'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회 외국인 정책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제정된 외국인정책 기본법으로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통하여 한국사회를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로 만들고 외국인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국적과 인종을 떠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근거로 법무부는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등 재한외국인은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5월 17일 제정, 2007년 7월 18일 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적, 용어 정의, 국가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시계획 수립과 시행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와 사회적응 지원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경과자 전문·외국인력, 과거 대한민국국적 보유자 등에 대한 대상별 처우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와 ‘세계인의 날’ (매년 5월 20일)에 관한 내용

3. 외국인정책위원회

■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정책을 종합적·거시적으로 추진할 필요에 따라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중점추진과제를 심의·조정하는 협의체이다.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 원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정부위원 :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장관·국정홍보처·중소기업청장·과학기술부장관·국무조정실장·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민간위원 :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4. 외국인정책 추진 내용

■ 외국인정책 관련 중앙부처의 역할

| 구 분 | 관련부처 | 역 할 |
|---------------------------------|--|--|
|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 법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정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출입국심사 ※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권한 위임 |
| 외국인의 국내체류관리, 난민인정 심사 | 법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 취업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난민심사재 |
| 재 외 동 포 | 법무부 외통부 교육부 문광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 재외동포자격부여, 거소신고 • 외통부 : 해외거주 동포에 대한 지원 • 교육부 : 재외동포 초청 교육연수 • 문광부 : 세계한민족 축전 개최 |
| 영주권 및 국적부여 | 법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권 및 국적부여 적격심사 |
| 외국인 국내투자 지원 | 법무부 산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 사증발급, 외국인등록, 입국 · 체류편의 제공 • 산자부 : 외국인 투자유치, 상담 등 고용허가제 등 |
| 고용허가제 등 단순노동 외국인력 도입 · 활용 | 노동부 법무부 중기청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MOU 체결 · 외국인 고용관리 • 법무부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허가 • 중기청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 |
| 불법활동 외국인 관리 등 사회안전망 확보 |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보호, 강제퇴거 집행 등 • 경찰 · 국정원 : 범죄 · 테러 등 관리 |
| 외국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응 지원 | 법무부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행자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 정부조직법상 인권옹호의 주무부처 (법률구조지원, 인권침해 구제 등)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노동부 : 산업재해 등 노동법상 권리구제 지원 • 복지부 : 의료구호 및 생활보장 지원 •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가정 지원 • 행자부 : 한글 · 문화교육 등 지자체를 통한 지원 |

■ 외국인력 유치

- '05. 9월, 전문인력, 고액투자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대폭 완화
- '07. 1월,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단순노무 외국인력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통합
- '07. 6월, 숙련 생산기능인력에 대한 영주허용방안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반영 ('08. 1 월 시행예정)

■ 동포 포용

- '05.~' 06. 2회에 걸쳐 동포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
- '07. 3월,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동포의입국 · 취업기회 대폭 확대

■ 정주외국인 지원

- '05. 8월, 영주자격자(3년 이상 거주)에게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부여
- '06. 12월, 국민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 · 부자 복지법 적용
- '06년 이후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교육 등 정주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 추진

■ 외국인 인권옹호

- '03. 1월부터 난민 인정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 '05. 5월부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무료 진료 실시
- '06. 1월~현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 '06. 9월, 초등학교 재학아동을 둔 불법체류 학부모가 자진 신고한 경우 한시적 체류허가 ('08. 2 월까지)
- '07. 5월부터 범죄피해 및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은 구제시까지 국내 취업 허용

5.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 방향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 (☎ 02-3480-1389)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세요.